



# A 백신 도입, 아직은 시기상조

- 국내 고병원성 A 백신 타당성에 대한 모의토론 -



지난 4월 29일 서울대학교 삼성컨벤션센터에서 2015 동물백신연구회 춘계 학술강연회가 개최됐다. 이날은 구제역 백신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에 대한 주제를 다뤘고, 이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토론된 내용을 정리했다.

- 편집자 주 -

## 좌장

한장혁 전무 ((주)고려비엔피)

## 토론자

홍영호 수의사 (아비아젠사)

안영기 위원장 (계란자조금관리위원장, 안일농장 대표)

김재홍 교수 (서울대 수의과대학)

송창선 교수 (건국대 수의과대학)

박정훈 과장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손영호 소장 (반석가금진료연구소)



### 홍영호 수의사

고병원성(H5) 백신을 접종하는 나라는 중국, 베트남 인도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 대부분 아시아입니다.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백신의 질이 떨어지고, 맞지 않은 타입으로 효과가 떨어지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중 중국은 백신 컨트롤이 잘되는 나라입니다. 아시아 대부분의 경우 백신을 접종 하더라도 방역체계, 관리가 소홀해 국가적으로 AI를 막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도 백신접종을 하더라도 범국가적인 방역관리를 갖추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 안영기 위원장

생산자 입장에서는 국내 백신 사용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입니다. 우리나라가 AI 백신을 사용하게 될 경우 AI 청정국 지위를 잃는 것은 물론, AI 상재국이 되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AI 상재국으로 전환되면 중국 양계산물 유입조건도 완화될 것으로 현재 축산물 가운데 자급률 99.6%를 보이는 계란도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수입될 부분을 무시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성계육으로 불리는 노계는 베트남 등지로 수출되고 있는데 백신 접종 후에는 수출길이 막히게 될 것이며, 산란성계육 도태지연으로 이어지면서 가격은 폭락하고 몇 년간 양계산업 불황이 지속될 것입니다.

한편, 가금산업은 산란계, 육계, 종계, 오리 등 각 축종별 사육환경과 유통경로가 다릅니다. 우리나라 일부 산란계농장의 경우 사육환경이 매우 취약한 실정으로 각 축종에 맞게끔 역학조사 보

완이 필요합니다. 백신 접종 사용 여부 검토 이전에 각 축종별 역학을 따져보는 것이 AI 예방에도움이 될 것입니다.

### 김재홍 교수

백신 사용이 왕도는 아닙니다. 먼저 AI 감염 시 백신 접종을 하면 임상증상과 바이러스 배출이 줄어들게 되어 피해가 감소합니다. 개체 간, 농장 간의 AI 전파 속도가 감소돼 국가적으로 살처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지만, 백신을 아직까지 시기상조라고 강조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백신접종을 해도 야외 바이러스는 배출이 되면서 농장에서 AI 감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가 있고 축주조차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바이러스는 우리 식탁에까지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어 산업적으로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부작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최종적 백신접종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가의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현재까지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 송창선 교수

구제역의 경우 미리 국내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면서 현재 외국에 의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를 보더라도 지금은 당장 AI 백신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추후 사용이 필요한 시기가 올 수도 있어 사전에 대비하자는 의견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날아오는 철새에 대한 피해가 큼니다. 저병원성(H9N2)이지만 인간에게 감염되는 사례가 나타나면서

만약 이런 바이러스가 산동성에서 우리나라로 넘어 오게되면 언제까지 살처분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인체 감염을 대비할 수 있도록 백신 개발의 능동적 자세가 필요합니다. 또한 오리에 대한 백신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AI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넘어왔다고 가정하면 H7, H9 등 저병원성 바이러스가 더 위협적이라는 하얼빈연구소의 분석에 따라 미리 대비가 필요합니다.

### 박정훈 과장

정부정책은 아직 AI 백신을 염두하고 있지 않습니다. AI가 위험하고 피해에 대해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는 하지만 산업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백신을 논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AI 발생에 따른 사후대처가 주요정책이었지만 향후에는 AI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SOP 중심으로 방역 측면에서만 다뤄졌지만 AI는 앞으로 방역만으로는 잡을 수 없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산업 환경 개선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국내 발생 농장을 보더라도 오리가 가장 문제로 오리 사육 시설은 방역이라는 개념이 부족합니다. 시설 개선을 위해 오리산업부터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허가제를 강화하면서 방역요건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질병관리 현장전문수의 사의 역할도 강화하고자 합니다. 농장에 질병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수의사가 필요한 시점에서 올해 100억원 규모의 질병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 가축질병공제 시험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

지막으로 현재까지 AI 발생에 따른 대응과 예산 등 농림축산식품부 중심이었지만 앞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로 현장방역의 모든 결정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책 위주, 농림축산검역본부는 법과 예산에 대해 중심이 될 것입니다.

### 손영호 소장

해외와는 환경과 사육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국내 AI 백신 사용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합니다. 현재 국내 AI 발생상황과 관련해 백신 사용 여부는 시기상조이지만, 백신연구는 필요하고,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국내 AI 바이러스 연구도 모 대학에서 이뤄지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 연구가 끊이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 결론

AI 백신 사용시 초래되는 산업적 피해와 양계 시장의 불황은 불 보듯 뻔하다. 혹시나 AI 백신을 접종한 농장에서 AI 감염 여부를 인지하지 못할 경우가 있고, 축주조차도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바이러스는 우리 식탁에까지 올라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어 산업적으로 피해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 백신 사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AI 백신 사용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백신을 찬성하는 일부 의견에서는 당장 사용하자는 의견보다는 추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AI 백신 연구는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리했다.

취재 | 장성영 기자 ch-spirow@hanmail.net